

석탄화력의 문제 개선은 정의(正義)의 문제 건강권과 환경권 차별 해소, 기후변화 대응에 직결

SBS 논설위원

박수택

인간이 숨 쉬는 공기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가운데 하나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고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한들 숨조차 안심하고 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요인인 미세먼지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면서 원인 제공자 또한 ‘상당수의 국민’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시설, 발전소, 자동차는 물론 폐기물소각, 대기오염을 경시하는 건설 현장 등의 경영자, 운영자, 사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다른 국민(일반가정)보다 싸게 사용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전기 절약에 노력하지 않는 기업이나 상업 경영자도 원인 제공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해를 위한 편의상 ‘절대다수’를 10으로 놓고 ‘상당수’를 4쯤으로 본다면 $10 \div 4 = 2.5$ 만큼의 국민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에 책임이 없으면서 애꿎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발생 원인과 무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있는데도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하다.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 국내 허용 기준이 미국, 일본보다 느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중시해야 할 국가의 자세가 외국 수준에도 이르지 못함을 말해준다. 충남의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수도권보다 느슨한 것이나, 대기오염 측정 시설이 10곳, 3.1%로 수도권(120곳, 37.4%)에 비해 1/12에 불과하다는 점은 '환경권, 건강권' 면에서 충남 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다름없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날아가 대기오염을 가중한다는 연구 조사에 비춰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수도권과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

정부의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이 목적으로 1988년 서울의 업무용 보일러와 인천화력 사용 연료를 LNG나 경유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후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늘려 현재는 전국 35개 특별, 광역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일러, 공동주택, 지역냉난방, 발전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충남권역의 경우 광역시인 대전은 1998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충남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2016 환경백서, 287쪽).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 권역을 충남으로 확대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당면한 충남권 화력발전소 집중과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지구 전체의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과도 직결한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감축해야 함에도 한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시했다.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을 한국은 포기하기는커녕 2022년까지 추가로 20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설비 11기를 퇴출한다고 하지만 현재 53기 26,273MW보다 1.55배 늘어난 40,744MW로 국제적인 화력발전 감소 추세에 역행한다. 후진적인 에너지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리더십,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성 논란 높은 원전과 청정하지 못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의 경우 원가가 싸기 때문에 정부가 비중을 낮출 노력을 하지 않고, 한전도 원가가 싼 전력을 사들여 팔아야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까닭에 청정에너지 사용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발전 비용도 올려야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경청해야 마땅하다(*이유수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8.18. 서울경제). 아울러 최근 폭염 상황에서 거듭 문제가 된 산업용, 상업용 전기 요금 우대 체계를 고쳐서 이들 부문도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업소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기 가동하는 업소의 에너지 낭비 행태와 당국의 느슨한 규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과 언론 보도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폭식증과 이것을 조장 방치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병세를 진정시키면서 치유함이 마땅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관계 당국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석탄 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온실가스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 수요 관리상 필요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력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야 한다.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고루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정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 지역을 되도록 일치시켜서 송전선로 문제와 같은 갈등 원인도 줄여야 할 것이다. 해법으로 전력 에너지 소비가 특히 많은 수도권에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환경정의에 부합한다. 만일 그리 한다면 발전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문제는 일찍 해결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환경, 건강, 안전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고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을 정부와 정치권은 자각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 참고 - 아래,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

[지속가능국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깨끗한 환경, 에너지 자립강화,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대신 이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를 환경복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하고, 이를 유지해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성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안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심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반드시 국제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도전과제입니다. 최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제 환경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약속) 중 [지속가능국가]

145.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146.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153.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발체〉